

4

일본 시민운동에서의 ‘생활’의 의미

한영혜

ネットのあゆみ

- '84 ローカルパーティ(地域政党) 神奈川ネットワーク運動設立
- '87 統一地方選で9人が当選、市議・町議14人に
- '90 国勢調査ホットライン設置(その後95年・00年・05年に実施)
- '91 統一地方選で18人当選、県議・市議・町議27人に
- '95 統一地方選で29人当選、県議・市議・町議41人に／NET政治スクール開校
- '96 Jネット(ローカルネットワーク・オブ・ジャパン)結成に参加／新しい公・共圏をつくる政策・制度研究会スタート
- '97 女性のアンパードワークをテーマに生活時間調査実施(その後01年・04年に実施)
- '98 WE21ジャパン(アジアの女性の自立をめざす)設立支援
- '99 統一地方選で28人当選、県議・市議・町議41人に／かながわNPO大学開校／市民福祉事業支援条例制定運動／NPOバンクWCC設立支援
- '01 市民社会チャレンジ基金設立／議員年金廃止アクションスタート
- '02 日韓市民社会フォーラム実行委員会に参加(その後03年から毎年開催)
- '03 統一地方選で28人当選、県議・市議・町議42人に／市民の生活・活動法律相談開始
- '05 神奈川の基地を知るピースリングツアー開始／住民基本台帳の駆け込み大量閲覧防止条例制定の市民立法運動
- '06 国会議員年金の廃止が国会で可決／地方議員の議員年金廃止運動をスタート
- '07 統一地方選で18人当選、県議・市議・町議30人に
- '08 企業団体献金をなくし個人寄付を広げる議案を国会に提出
- '09 子育て支援政策プロジェクトで県・国との円卓会議開催
- '10 「女性と若者の働き方調査」実施

ネット大和市市民会議 046-272-1530
 県市民03市あさぎ会 046-222-8947
 ネット海老名 046-235-7014
 ネットあやせ 046-76-3900
 ネットさがみはら 042-767-5156
 ネット厚木市民ネット 046-252-4464
 ネット伊勢原 0463-92-8185

神奈川ネット
事務所連絡先

〒231-0006
 横浜市中区南仲通
 4-40 小島ビル2階
 TEL: 045-651-2011
 FAX: 045-651-2081
 E-Mail:
 kgnet@kgnet.gr.jp

ローカルパーティ

神奈川 ネット

生活の課題は政治に直結しています

改革は政治とお金から

生活の課題は政治に直結しています

神奈川ネットワーク運動

URL <http://kanagawanet.org/>

10月: 3516141 口座名: カン/口神奈川ネットワーク運動 代表 永島順子

2010年10月発行

■ (위) 지역정당인 '가나가와 넷'의 홍보 팸플릿 표지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1965년 4월 24일 벌어진 '베헤렌'의 첫번째 시위 장면, 사이타마현(埼玉県) 쓰루가시마(鶴ヶ島)의 생활클럽생협, 도쿄도 스기나미구 '생활자 넷'의 홍보지인 『생활자 넷 스기나미』



1. 서론

199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생활’이나 ‘생활자’라는 말이 거의 모든 정당과 정치가의 슬로건에 등장하게 되었다. 다카바타케 미치토시(高島通敏)에 따르면, 오늘날 ‘생활’이라는 말은 “사회체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소멸한 이후 시대 최대의 공통 이데올로기, 정치의 정당화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¹⁾ 아마노 마사코(天野正子)는 ‘생활자’를 이 시대의 ‘오마모리고토바’(お守り言葉)로 규정한다. ‘오마모리고토바’란 “그 말을 사용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부적’ 같은 말을 뜻한다.²⁾ 다카바타케와 아마노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생활’, ‘생활자’를 전략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이 말이 지니는 정치적·사상적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 지은이 | 한영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와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쓰쿠바대학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현대일본사회 담당)로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 일본의 정체성과 마이너리티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아 왔으며, 향후 일본의 시민사회, 지식의 형성과 변용, 재일조선인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주요 저서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일본사회개설』이 있으며, 역서로는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 청말 중국지식인의 일본유학』, 『일본의 사회과학』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두 개의 어린이날 : 선택된 이야기와 묻혀진 이야기』, “An Analysis of the Discourse on the Citizens' Movement in Korea : A Comparison to the Japanese Case” 등이 있다.

1) 高島通敏, 『生活者の政治學』, 東京: 三一書房, 192~193쪽.

2) 天野正子, 『『生活者』とは誰か』, 東京: 中公新書, 1996, 7~9쪽. 이 말은 본래 철학자인 쓰루미 슌스케(鶴見俊介)가 처음 사용한 용어라 한다.

사실 대립하는 정치·사회 세력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반드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패전 후 일본에서 ‘평화’,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혁신이 공유하는 말이 되었다. 상이한 언어를 쓰던 세력들이 동일한 언어를 서로 다른 의미 내용을 담아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 상징을 접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였다. 일본 근현대사에서 ‘생활’은 생활개선운동이나 신생활운동같이 국가에 의한 관제 운동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된 전례가 있다. 반면, 반체제적·저항적 운동을 추동하는 이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전시(戰時)에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던 민중의 ‘생활’이 패전 후 분출되면서, 그것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국가 통제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확산된 주민운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관련 쟁점들을 지렛대로 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여 각지에서 혁신자치체를 탄생시켰다. 이때 ‘생활’은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한 국가가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은 ‘생활’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렇게 ‘생활’은 1990년대 이전에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이다. 1990년대의 상황에 대한 다카바타케와 아마노의 문제제기는 이 말이 정치권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정부 여당이나 보수 측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확산시킴으로써 과거에 존재하던 ‘생활’의 의미를 둘러싼 대립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대립축이 희석되는 것은 ‘생활’이라는 상징이 비판적 시민(주민)운동을 추동해 낼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양상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관=행정이 독점하던 공적 영역의 한 축을 맡는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1998년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³⁾이 제정되었고,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제도들이 도입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그룹과 활동들이 증대했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 공급이나 마치즈쿠리(町

づくり,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대개 복지, 환경 등 생활상의 과제를 다루는 활동들이 증대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시민운동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강화를 뜻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일본정부는 재정 악화와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냈고, 지방정부 또한 재정 문제로 인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여, 행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했다. 행정개혁=‘행정축소’와 연동된 시민활동의 활성화는 정부에 의한 자원 동원의 성격을 내포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복지나 환경 등 생활 관련 문제를 다루는 활동들은 종래의 시민운동과는 달리 일종의 사업 형태를 띠기도 하여, ‘운동’과 ‘활동’과 ‘사업’을 구분하는 지점이 애매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활동들은 일견 탈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지역에 토대를 두고 주로 생활 관련 쟁점만을 다루며, 따라서 국가적·전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개혁적이기보다는 체제 순응적이라는 평가가 있다.⁴⁾ 그러나 ‘생활’이 반드시 국가적·정치적인 것과 무관한 것은 아니며, 일본의 시민운동에서 이들은 반체제적 저항의 지점과 새로운 지향점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생활’의 그러한 의미들을 찾아 내어 오늘날의 맥락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의 진보적인 운동에서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고찰 대상은 쓰루오카(鶴岡)생협, 베헤렌(べ平連, 정식 명칭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생활클럽생협의 세 운동체다. 아마가타

3)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시민 볼런티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1998년에 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행정개혁을 배경으로 한다.

4) 정진성은 일본의 시민운동을 “지역에 뿌리박힌 건설한 생활운동”이라 하면서, 그 건설성의 저변에 지역의 보수성과 국가의 영향력이 깔려 있음을 지적하였다(정진성, 『현대일본의 사회운동』, 나남, 2001). 또, 박원순은 일본의 시민운동이 너무 작은 것에만 집착하고 전체 변화를 위한 운동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거창한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도 건강한 공동체와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박원순, 『일본 시민사회 기행』, 아르케, 2001). 상반된 평가지만, 일본의 시민운동의 특징을 ‘지역’과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는 것은 일치한다. ‘지역’과 ‘생활’에는 일상생활의 건설함과 전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무관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내재되어 있고, 국가에 대한 저항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도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영혜, 『지역사회와 시민운동』(한울, 2004) 서장을 참조하라.

(山形)현에 거점을 둔 쓰루오카생협은 1955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창립된 근로자생협의 하나로, 노동자 세대와 지역 주민을 함께 조합원으로 조직한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생협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베헤렌은 1965년 베트남 전쟁 반대를 목표로 결성된 시민단체로, '시민' 개인의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추구하였다. 생활클럽생협은 1965년에 조직된 생활클럽을 모체로 해서 1968년에 설립된 생협으로, 여성 특히 전업주부층을 조합원으로 조직화하였다. 이 세 조직은 노동자(+지역주민), 시민, 주부(여성) 등 상이한 계층을 인적 기반으로 한 만큼, '생활'을 의제화하는 관점이나 목표, 논리도 서로 달랐다. 각 운동체의 저항의 지점은 상이했지만, 그 근저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각 운동체의 활동의 궤적에서 '생활'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오늘날의 맥락에서 '생활'이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 사례들 중 베헤렌과 생활클럽생협은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꼽힌다. 베헤렌의 베트남반전운동은 '시민운동'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일본의 사회운동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운동으로 평가된다. 생활클럽생협은 의식적으로 여성을 조직하였고, 후일 생협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는 가운데 여성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현대 일본정치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시민운동'의 등장을 1960년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 안보투쟁 직후이며, 그것은 운동 주체나 조직 방식 등에서 기존의 국민운동 방식이나 노동운동과 다른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였다.⁵⁾ '생활', '생활자'는 '생산', '노동자'(특히 조직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에 대한 '시민운동'론의 핵심 개념이며, 따라서, 1950년대의 사회운동 또는 노동운동과 1960년대 이후의 '시민운동'은 연속성의 관점에서 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생활'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전후의 사회운동을 보면, 1950년대에도 풍부한 운동의 자산을 볼 수 있으며, 그 운동의

5) 한영혜, 「일본 시민운동 담론의 형성」,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43~83쪽 참조.

자산은 1960년대 이후의 운동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생협운동이나 소비자운동이 그 한 축이고, 생활기록[生活綴方]운동과 씨클운동이 다른 한 축을 이룬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전자의 사례를 다룬다. 1950년대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근로자생협으로서의 쓰루오카생협을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 검토하는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다. 쓰루오카생협의 생활협동운동은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노동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 주민운동의 성격도 띤 독자적인 운동 조직과 방식으로 근로자생협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에 놓이는 생협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세 운동체 각각의 활동궤적을 상세히 포괄적으로 고찰하지는 않는다. 어떤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들이 등장했고, 각 주체들이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논리로 ‘생활’에 의미를 부여했고,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자의 생협운동 : ‘생활의 협동’

(1) 전후 생활방어와 생협운동의 대두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은 생활방어 운동으로 출발했다. 패전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생협운동, 소비자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주체로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형성되었다.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부터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 협동조합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1945년 11월 18일 전전의 소비조합 운동⁶⁾의 지도자들이 모여 ‘일본 협동조합동맹’(일협)을 결성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더욱 촉진되었다. 일협 설립을 계기로 1946~47년에는 조합이 폭발적인 증대는 1947년 6월경에는 조합 수 6,500개, 조합원 수는

6) 일본의 소비조합은 187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다이쇼기에 발전했다. 전전기의 소비조합은 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성격을 지닌 자주적 운동체로서의 소비조합과 ② 위로부터의 사회정책이라는 성격을 지닌 법인체로 대별된다. 이들은 전시기에 해산되거나 사업이 정지되었다가, 전후에 부활되었다. 전전기 일본의 소비조합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을 참조하라. 大窪一志, 『日本型生協の組織像』, 東京: コープ出版, 1994, 26~39쪽.

300만 명에 달했다.⁷⁾ 전후 폭발적인 생협의 증대는 극심한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 인한 물가 폭등, 암거래 횡행에 따른 물가 불안 등 생활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식량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물자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고 사람들은 이 과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가고자 했다. 전후의 사회운동은 이와 같이 생활방어 운동으로 출발했다.

이 시기의 생협들은 생협으로서의 독자적인 방침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대개 ‘총체적 포섭’[丸抱え] 방식, 즉 기존의 직장과 지역 단위의 구성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해서 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직장 단위의 직역(職域)생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생협은 주로 정내회(町内会) 단위였으며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조합이었다. 이렇게 기존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협은 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GHQ는 1947년 ‘정내회 및 유사단체 폐지’에 관한 정령을 공포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내회 및 정령 공포 이후 설립된 정내회 유사단체의 해산을 지시했다. 경시청은 당초 생협을 ‘정내회 유사단체’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협은 GHQ와의 교섭을 통해 생협 해산을 피하고, 나아가 생협법 제정운동을 통해 생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⁸⁾ 각 지 상공회의소 등 중소상공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생협법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협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협법 제정을 위한 소비자 대회 개최, 국회 청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결국 1948년 7월 3일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이 성립되었으며, 10월 1일 법 시행과 동시에 1900년 제정된 이레 협동조합을 규율했던 ‘산업조합법’은 폐지되었다.

7) 이 중 5,487개의 조합이 일협에 참가했다. 1947년 5월에는 300개의 조합, 130만 조합원을 거느리는 ‘도쿄도 생활협동구매이용조합 연합회’가 창설되었고, 도호쿠/간토신에츠/도카이호쿠리쿠/간사이/규슈 등 5개 지구에 협의회가 열려 지방조직이 정비되었다(相馬健次, 『戦後日本生活協同組合論史』,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2002, 2쪽). 1947년 7월 5일 국제협동조합데이를 계기로 ‘전일본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전협연)가 결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8) 뉴딜파의 개혁적 인사들이 있던 GHQ는 일협에 협조적인 입장이어서 생협의 존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생협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와 더불어 뉴딜파들이 본국에 소환된 데다가 각 당이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가 얹혀 국회 상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협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国民生活センター編, 『戦後消費者運動史』, 東京: 大蔵省印刷局, 1997, 52~54쪽.

그러나 이후 오히려 생협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 1950년 10월에는 최성기의 6분의 1에 불과한 1,130개 조합으로 대폭 감소했다.⁹⁾ 당초 생협의 설립 동기가 식량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물자의 확보를 위한 공동구매 이용에 있었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호전되자 결집의 동기도 상실되었다. 또한 경제통제가 대폭 완화되어 경쟁이 격화되자, 물품이 입수될 때마다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초보적인 공동구매 방식을 취하고 경영관리 기술이 없던 초기 생협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2) 노동운동과 생협의 제2의 고양

1951년 3월 일협이 해산되고 ‘일본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일생협)가 창립되면서 생협운동은 제2의 고양기를 맞게 된다. 1950년대 들어 노조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지속적인 복지활동이 형성되었는데, 이 노동자 복지운동이 생협운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¹⁰⁾ 1950년대 생협운동의 확대는 노동자 복지운동과 맞물리며 전개된 만큼 직역(職域)생협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지역생협은 정내회나 부락회를 기반으로 전후 각지에 설립되었지만 수년 내에 소멸했다. 이 시기에 확대된 직역생협은 직장 내가 아니라 지역에 점포를 두고 지역 일원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물자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기존의 직장내 점포 방식 생협과 구분하여 ‘지역근로자생협’이라 한다. 생협의 구역은 노조 지구조직의 지역과 중복되게 설정하고 지역의 중심부에 점포를 설치했다. 생협 조직은 생산지점인 기업 내부에 두고 점포는 생활지점인 지역에 두는 이런 방식은 당시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복지, 생활 방위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다.

지역근로자생협은 지구노동조합협의회, 지구복지대책협의회 등 노조의 지

9) 国民生活センター 編, 『戦後消費者運動史』, 49쪽.

10) 기존의 생협 중 대규모 조합을 중심으로 일부 생협이 상승기조에 놓인 점도 생협운동 고양의 요인이지만, 운동사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은 1950년 전후부터 시작된 노동자 복지운동이다. 노동자 복지운동을 주도한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구조직을 추진 모체로 하고, 그 상당수는 각 현의 노정과와 노정사무소의 지도와 원조를 받아 설립되었다.¹¹⁾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일정 정도 관·행정의 지원을 받아 생협이 만들어진 셈이다. 1950~51년에 돗토리(鳥取)현과 오이타(大分)현에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55년 무렵에는 지역근로자생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편 지역근로자생협의 증대와 더불어 반(反)생협운동이 발생하여 1955년 무렵에는 정치 문제로 발전했다. 1956년 중소기업정치연맹이 결성되어 중소기업단체법 제정을 피하고 자민당 유지 의원들과 더불어 일련의 반소비자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자 일본 생협은 부인단체와 노동단체의 결집을 호소해 소비자 단체의 통일조직 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통일운동을 추진하였다.

지역생협은 노동자 정당, 노동조합과 더불어 노동자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지닌 노동자 사회를 형성하려는 운동의 일익이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탄광지역에는 탄광촌[炭住]을 중심으로 노동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독자적인 노동자 문화의 주체로서 탄광노동조합, 탄광주부협의회와 함께 탄광생협이 자리매김되었다. 탄광촌에 살면서 노조나 주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생협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사회당에 투표하는 독자적인 노동자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노동자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당 도정(道政)이 성립된 시기가 있었다.¹²⁾ 그러나 노조를 모체로 하여 설립된 지역근로자생협은 임원구성과 조직원칙도 노조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등, 노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이같은 노조 의존 체질 때문에 생협으로서의 독자적인 조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경영 관리의 발전이 저해되었다.¹³⁾ 그런 한계로 인해 많은 단위 생협이 1960년대 고도성장의 진전과 유통혁명의 진전에 대처하지 못해 경영부진에 빠지게 되었다.

11) 相馬健次, 『戦後日本生活協同組合論史』, 43쪽.

12) 田中秀樹, 『消費者の生協からの転換』,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1998, 45쪽.

13) 大窪一志, 『日本型生協の組織像』, 43쪽.

(3) 쓰루오카생협 — 지역을 토대로 한 ‘생활의 협동’¹⁴⁾

쓰루오카생협은 이렇게 반생협운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설립된 것으로, 지역에서 노동자와 더불어 일반시민을 조직화하는 ‘지역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55년에 설립된 쓰루오카생협은 근로자 생협이면서도 노조 의존을 탈피하여 지역생협의 성격을 접목시키는 지역화를 추진했다. 1950년대 전반 야마가타·다가와(山形·田川) 지구에 노동자 복지대책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생활물자 공동구입과 좋은 영화 감상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협 설립안이 제기되어 선진생협 시찰, 생협연구회 등을 거쳐 쓰루오카생협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¹⁵⁾ 쓰루오카생협은 ‘동일한 군, 시에 직역과 시민층이 통일된 조합, 즉 단일생협’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에 따라 노조원의 거주지에서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주변 10세대 정도가 하나의 반(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반’을 조직해 나갔다. 반 조직은 ‘직장반’과 ‘가정반’의 양 축으로 이루어졌고, 후자가 곧 지역반이었으며 대개 주부들이 그 구성원이었다.

조합원은 이 반을 통해 생협 운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각 반은 월 1회 반회의를 개최하여 생활과 물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었는데, 반회의는 조합원의 요구가 제출되는 장인 동시에 연대감의 원천도 되고 학습의 장도 되었다. 쓰루오카생협은 공동구입을 중심으로 한 구매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조합원의 요구를 모든 분야에 걸쳐 다루었다. 이는 공동구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생협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의 총체적인 생활을 협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라는 운동 방침에 입각한 것이었다.

쓰루오카생협도 공동구매 사업으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동네의 가게들과 같은관계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익사업보다는 조합원의 생활보호라는

14) 이 글의 쓰루오카생협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필자가 1998년 여름에 수행한 현지조사 연구에 의거하고 있다. 한영혜, 「생활대로서의 지역사회와 교육 : 쓰루오카생협의 교육운동을 중심으로」(『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004) 참조.

15) 한영혜, 「생활대로서의 지역사회와 교육 : 쓰루오카생협의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263쪽.

원칙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기반을 확대해 갈 수 있었다. 1964년 니가타(新潟) 지진 때는 생필품 공급이 어려워지자 생협이 신속히 간장 등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주었고, 석유위기가 닥친 1970년대에는 등유 불매운동을 펼치면서 1,654명의 주민을 모아 원고단을 만들어 부당한 가격 인상 카르텔을 제소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 방위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은 노조원뿐 아니라 지역의 일반시민도 생협조합원으로서 함께 참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과 주체 측면에서 노동운동과는 다른 주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쓰루오카생협에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생활 관련 문제를 쟁점으로 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은 1960년대 초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 뇌염의 대유행에 대응하여 소련제 수입 생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 학교 급식용으로 쓰이던 미국산 수입 탈지분유를 지역 생우유로 바꾸는 운동 등은 지역반 회의에서 제출된 의제가 조합원인 주부들 주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의 근평(勤評)투쟁, 일제학력고사 반대 투쟁 등을 계기로 생협은 지역의 교육 문제도 다루게 되어 교육활동센터를 만들어 민간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먹거리나 교육은 조합원의 관심이 높은 생활과제이면서 노조의 반체제적 운동과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학교 급식에서 미국산 탈지분유를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생우유로 바꾼 운동은 탈지분유 급식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역의 축산노동자(축산 농민)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소비자와의 연대를 형성하여, 미일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지역생활이 지배당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¹⁶⁾

1978년 간사이(関西)지방에 본거지를 둔 대형 유통점 다이에가 지역에 진출하기로 결정하자, 지역경제가 외부 자본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쓰루오카생협은 쓰루오카 지역 상점들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협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즉 경제논리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신, 지역에서 생활협동을 통해 대자본과 대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

16) 한영혜, 『생활대로서의 지역사회와 교육』, 275~276쪽.

에 따라 기존의 점포 명칭을 ‘생활의 센터’로 바꾸었고, 1980년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동의 집’을 만들게 되었다. 기업의 유통 합리화, 대형화에 대응하여 효율성 강화 등 경제 논리로 대응한 많은 근로자 생협들이 결국 쇠퇴했지만,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생활협동을 추구한 쓰루오카생협은 위기를 넘기고 성장하게 되었다. 1980년 야마가타현 내 문화운동, 농민운동, 시민운동 등 각 분야의 교류연구집회에서 지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시점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을 계기로, 1983년에는 쓰루오카를 포함하여 야마가타현 내 5개 지역 조합¹⁷⁾이 연합체로서 교리쓰사(共立社)를 출범시켰다.

3. ‘시민운동’과 ‘생활’의 의미 변화

(1) 새로운 ‘시민’의 대두 : ‘생활자’

1960년 일본에서는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안보투쟁’¹⁸⁾이라 일컬어지는 이 운동은 안보조약 개정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으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운동 주체와 운동 방식이 제시되어 일본의 사회운동사에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투쟁 종식 이후 지식인과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와 반성 등을 통해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시민운동’이 제창되었다.

안보투쟁을 주도한 것은 138개 단체로 구성된 ‘안보개정 저지 국민회의’였는데, 사회당과 총평(總評)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노조와 전학련(全学連) 등은 조직을 기반으로 그에 속한 노동자와 학생 등 많은 대중을 동원할 수 있

17) 1997년 조사 당시에는 7개 지구 생협이 참가.

18) 1957년에 성립된 기시(岸) 내각은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 1월 개정 안보조약이 조인되어 5월 19일 중의원에서 여당인 자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자민당의 단독 강행타결을 계기로 ‘반안보’, ‘안보개정저지’ 투쟁은 ‘반기시’,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국회에서 승인된 비준안은 1달 후에 자연 성립되기 때문에 5월 19일 이후 1개월간 전후 최대 규모의 대중 시위가 계속되었다. 결국 1달 후인 6월 23일 신안보조약은 정식 발효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기시 내각은 총사직을 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1960년 가을 총선거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주변을 가득 메운 시위대에는 노조나 학생 조직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노 오사무(久野収)는 이들을 “공부와 놀이에 열중하는 학생들”과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서 사생활에 안주했던 서민들”, “한 번도 정치활동에 참가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이들은 ‘천위집단’ 또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¹⁹⁾ ‘젊은 일본의 모임’(若い日本の会)²⁰⁾은 5·19 강행타결에 대해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조직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참가자가 회원이며, 회원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돈을 내고 강행 안보타결 불승인이라는 목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새로운 운동 방식을 표방했다.²¹⁾

이 새로운 주체와 운동 방식이 ‘시민’, ‘시민운동’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안보저지 국민회의의 지도부가 일본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고 ‘조직’ 중심의 구세대적인 운동방식을 견지한 것이 안보투쟁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 지식인들은 ‘시민’ 개념을 축으로 새로운 운동론을 모색했다.

이때 제시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생활자’라는 점이다. 시민은 정치나 사회운동과 무관한 직업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인간이다.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정치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구노는 시민을 “정치로부터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부터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에 반해 “모든 것을 당파의 이해와 승패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정치주의자’다. 생활자로서의 시민은 ‘조직’ 영역의 외

19) 久野収, 『市民主義の成立』, 東京:春秋社, 1996, 12~13쪽.

20) 사실 안보투쟁 이전부터 정치적 쟁점에 대해 ‘시민’을 표방한 주체의 정치행동이 조직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58년 경직법(警職法: 경찰직무집행법의 약칭) 제정을 둘러싸고, 혁신계 정당이나 노조와 무관하게 지식인과 저널리스트 등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조직되었고, 시위와 서명 등에 일반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에토 준(江藤淳),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등 후일 사상적으로 사뭇 다른, 심지어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이 당시 20대의 젊은 문학도로서 경직법에 반대하여 ‘젊은 일본의 모임’(若い日本の会)을 결성한 바 있다.

21) 이것은 모임의 간사로서 대표격인 에토 준이 60년 7월 『주오코론』(中央公論)에 기고한 「소리없는 자들도 행동한다」(声なきものも起き上がる)에서 밝힌 내용이다. 小原英二, 『〈民主〉と〈愛国〉』, 東京:新曜社, 2002, 517쪽 참조.

부에 있는 사람이며 따라서 조직에 의해 동원되거나 조직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무당무파’이다. 구노는 안보투쟁 때 학생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방침에 따라 참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참가한 학생을 ‘무류파’ 학생이라 칭했다.²²⁾

생활자로서의 시민은 사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한다. 가토 히데토시(加藤秀俊)는 안보투쟁에 등장한 시민은 “중간문화적 인구”로, 5월 19일 이후 “현재 향수하고 있는 여러 이익의 원천이 끊어질 위험성”을 느껴 정치적 행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시민을 추동하는 힘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감각”이라는 것이다.²³⁾ 이시다 다케시(石田雄)는 “5·19 이후의 상황하에서는 사생활의 안전을 권력의 침해로부터 지키는 것(이것은 헌법 전문에 있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방위적 자세도 된다)이 동시에 공공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같은 “사생활과 공공성과의 표리일체 관계”를 “새로운 개인주의”라 하였다.²⁴⁾

이렇게 안보투쟁을 계기로 대두한 ‘시민’의 개념에서 ‘생활’은 핵심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 여기서 ‘생활’은 ‘정치’와 대조된다. ‘생활자’와 ‘정치주의자’는 행동 원리, 행동의 토대가 다르다. ‘생활’은 당파성, 정치주의, 조직 등과 무관한 지점에서 주체 형성을 추구하는 전략적 의미를 담은 개념이었다.

(2) 베헤렌 운동: ‘보통시민’과 ‘보편적 인간’

안보투쟁을 거치며 대두한 시민운동론은 1960년대 중반 베헤렌 운동을 통해 각각적으로 실천된다. 베헤렌은 1965년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 개시를 계기로 하여 결성된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조직으로, 정식 명칭은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다. 베헤렌은 안보투쟁 때 만들어진 ‘소리없는 소리의 모임’의 다카바타케 미치토시의 제안으로 다카바타케와 쓰루미 슌스케가 결성을 주도했으며, 안보투

22) 久野收, 「市民主義の成立」, 11~12쪽.

23) 加藤秀俊, 「日常生活と国民運動」, 『思想の科学』, 1960년 7月号.

24) 石田雄, 「なぜ政治は国民のものにならないか」, 『中央公論』, 1960년 8月号, 71쪽.

쟁 때 탄생한 시민단체들 가운데 존속한 단체들이 다시 결집해서 작가인 오다 마코토(小田実)를 대표로 맞아들여 발족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칭을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문화단체연합’이라 하였다. 도쿄에서 베헤렌이 출범한 데 이어 교토에서도 베헤렌이 만들어졌는데, 교토 베헤렌은 처음부터 개인 참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식 명칭을 ‘베트남에 평화! 시민연합’이라 했다. 도쿄의 베헤렌도 나중에는 사실상 개인 참가가 전면에 나오게 되어 1년 후에 ‘시민문화단체연합’에서 ‘시민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도쿄의 베헤렌²⁵⁾은 1965년 4월 24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시미즈다니(清水谷) 공원을 기점으로 한 데모 행진을 베헤렌의 발족으로 삼았다. 이후 매월 정례 데모를 계속하여 1973년 10월 6일 제100회(정례 데모로서는 97회)로 이를 마감했다.²⁶⁾ 8년여 동안 계속된 시미즈다니 공원에서 도쿄역에 이르는 정례 데모 행진에 많을 때는 3천 명, 적을 때는 40명 정도가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베헤렌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다. 베헤렌은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 행동을 일으키는 곳에 성립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1명이라도 베헤렌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든 만들어질 수 있어 최성기에는 약 500개의 베헤렌이 활동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고 자율적으로 활동하였다.

베헤렌은 이 운동의 주체가 ‘보통시민’임을 강조하였다. 1965년 4월 24일 최초의 데모를 알리는 팸플릿은 “우리는 보통시민입니다”로 시작된다. 그에 의하면 “보통시민이라는 것은, 회사원이 있고 소학교 선생님이 있고 목수가 있고 여주인(おかみさん)이 있고 신문기자가 있고 꽃집 주인도 있고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25) 베헤렌 자신의 사상 내지 논리에 따르면, 1965년 4월 24일에 발족하여 1973년 10월 6일에 해산된 것은 베헤렌 그 자체가 아니라 도쿄의,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구라자카(神楽坂)에 사무소를 둔 베헤렌이다.

26) 이날 데모행진을 기해 도쿄의 베헤렌은 실질적으로 해산되었고, 이는 신문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ベ平連最後の定例デモ：ユニークな歴史八年』, 『毎日新聞』 1973년 10월 7일자. 平連 編, 『資料・「ベ平連」運動』 下巻, 東京：河出書房新社, 1974, 457쪽. 그러나 대표인 오다가 해외 출장중이었던 터라, 오다의 귀국을 기다려 이듬해에 정식 해산식을 갖게 된다.

영어를 공부하는 소년이 있고, 즉 이 팸플릿을 읽는 당신 자신”이다.²⁷⁾ 그것은 “정당이나 노조 등에 속하지 않은” 즉 정치가나 조직 노동자 또는 활동가가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뜻한다.²⁸⁾

이러한 ‘보통시민’은 안보투쟁에서 대두한 ‘생활자’로서의 시민이다. 오다에 따르면, 시민은 우선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없는 한 ‘공’의 목적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단,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느낄 때는 움직이며, 그러나 운동이 길어지거나 탄압이 가해지면 다시 자신의 ‘사생활’ 속으로 도망쳐 버린다. 스토이시즘(stoicism)과 비장감이 적고, 따라서 좌절감도 적다.²⁹⁾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속(俗)에 있는 인간”으로서, 매우 약한 존재다. “운동의 전위에 설 만큼 역량과 식견과 용기와 헌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동 참가가 자명한 일이지만, 보통시민에게는 참가를 지속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³⁰⁾ 오다는 ‘전위당이라는 행자(行者) 집단’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인간’, 즉 생활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세상 바꾸기’(世直し)라고 했다. 그것은 “혁명의 멋진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보증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고 계속 살아가려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한다.³¹⁾

오다는 반체제적 운동을 전전(戰前)형과 전후(戰後)형으로 구분하고, 전자에겐 운동의 목적은 ‘공’에 있고 ‘사’는 이용되어야 할, 때로는 희생되어야 할 수단에 불과한 데 반해, 후자에게는 우선 ‘사’가 있고 그것에 연결되는 형태로 ‘공’의 명분

27)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上巻, 東京: 河出書房新書, 1974.

28) 이튿날인 4월 25일자 『아사히신문』은 「어제 문화인 등 데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가 오다 마코토 씨 등의 선동으로 정당이나 노조 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약 1500명”이 시위행진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회사 퇴근길의 젊은 여성들”도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통시민으로서 참가해 주십시오”라고 권유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베레렌의 ‘보통시민’이라는 말에는 ‘정당이나 노조 등에 속한 것’과의 대비가 함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上巻, 10쪽.

29) 小田実, 「普通の市民にできること: 「公」と「私」の問題」, 『毎日新聞』1965년 5월 7일자.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上巻, 10~11쪽에서 재인용.

30) 小田実, 『生きつづける』ということ, 東京: 筑摩書房, 1972, 10쪽.

31) 小田実, 『生きつづける』ということ, 10쪽.

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안보투쟁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슬로건 하에서 대규모 인파를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안보의 강행타결이 암시하는 민주주의의 파괴가 전 후에 겨우 확립된 사람들의 ‘사’를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³²⁾ 오다는 이렇게 ‘생활자’로서의 ‘보통시민’을 가능한 한 많이 운동에 결합시키기 위해 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한 가지에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베헤렌 운동의 목표는 단 하나, ‘베트남에 평화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남베트남으로부터의 철수’였다.³³⁾

그런데 베헤렌 운동에서 시민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자’ 이외에 또다른 측면을 갖는다. 그것은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이라는 성격이다. 베헤렌은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반전운동을 위한 모금 광고를 내고 ‘일미 시민회의’를 조직하는 등 국경을 넘어서 시민연대 활동을 추진했다.

오다는 1965년 8월 11일에 개최된 일미 시민회의 모두 발언에서 “예를 들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택할 권리. 그런 행위를 옆에서 위협하지 않을 의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의무, 타인의 자유를 확보할 의무.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연대의 기초로 제시했다.³⁴⁾ 또 쓰루미 요시유키(鶴見良行)는 “국가권력이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의 주장, 그리고 이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불복종에 의한 반전평화운동”이 ‘일미 시민회의’의 사상적 특징이라고 하였다.³⁵⁾ 쓰루미는 평화운동의 방법론으로서 “국민단념”론을 제안했는데, 그에 의하면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단념한다는 것은 국가에 개인의 모든 권리와 사상이 흡수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자연권 철학을 기본으로 하되 더 나아가 ‘국민임을 방기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단념’이라는 개인의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는 말을 쓴 것은, 일본의 평화운동이 동원 데모와 각 집단의 헤게모니 투쟁과는 완전히 다른 개인의 차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32) 小田実, 「普通の市民にできること: 「公」と「私」の問題」,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 上巻, 11쪽.

33) 小田実, 「普通の市民にできること: 「公」と「私」の問題」, 12쪽.

34)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 上巻, 110쪽.

35) 鶴見良行, 「新しい世界と思想の要請-日米市民会議の意味」,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 上巻, 125쪽.

한 사람 한 사람의 ‘단념’으로부터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과 ‘반역’이 생겨나리라는 것이다.³⁶⁾

일본 국민됨을 방기할 수 있고 보편적 인권의 이념을 매개로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자각적 개인으로서의 ‘시민’. 이런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시민’은 ‘속(俗)에 있는’ ‘보통시민’과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형성한다. 베헤렌운동 시민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일미 시민회의’에 참가했던 고마즈 사쿄(小松左京)는 베헤렌 사람들, 그리고 ‘일미 시민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평화 전문가’가 아니라 “풍요롭고 평온한 내일의 생활을 바라고 있는, 조금도 영웅적이지 않은 보통 사람들. 일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저금을 하고,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소한 가정의 불행이나 우연한 재해를 당하거나 하면 서 그래도 어떻게든 애써 삶을 계속 영위해 가는 ‘평균적 인류’”³⁷⁾라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베헤렌 운동에 대한 인식은 “오다 마코토 씨와 쓰루미 슌스케 씨 같은 현인, 강자가 세계적 식견을 갖고 영어로 여러 나라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외부에서 일본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극히 소수의 강자”의 운동, “지연적인 공동체 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는 여러 자유로운 시민”을 끌어들이는 “강자의 시민운동”이라는 이로가와 다이키치(色川大吉)의 비판³⁸⁾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베헤렌 운동의 시민은 “80%의 일본인, 약자인 일본인”과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70년대 들어서는 베헤렌이 주창한 ‘시민’과 ‘시민운동’은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가두 데모형, 근대주의적·구미형 시민지향적·‘문화인’과 학생 중심의 것, 이미 시류와 더불어 소멸한 운동의 실패의 역사”라는 비판이 확산되었다.³⁹⁾

36) 鶴見良行, 「日本国民としての断念」, 『鶴見良行著作集2 べ平連』, 東京:みすず書房, 2002, 84쪽.

37) 小松左京, 「『平均の人類』の願い:『日米市民会議』に参加して」,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上巻, 141쪽.

38) 色川大吉, 「国家幻想と草の根のはざまで」, 『潮』, 1973년 7月号. 古川勇一, 「新たな出発に際して」,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下巻, 442쪽에서 재인용. 사실 베헤렌 성립을 주도한 핵심적인 인물들은 학계, 문화계의 지식인들이었고, 베헤렌의 상징인 오다가 도쿄대 출신의 하버드대 유학파인 것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학력이 나 네트워크, 해외 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 국제 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셈이다.

39) 古川勇一, 「新たな出発に際して」, べ平連 編, 『資料・「べ平連」運動』下巻, 442쪽에서 재인용.

(3) '시민'과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후루카와 유이치(古川勇一)는 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이라는 용어로 시민권을 얻은 1960년 안보투쟁 이후 11년간을 1960~1967년, 1967년 말~1969년 가을, 1969년 가을~현재(1973년)의 3기로 구분하고, 베헤렌 비판 또는 시민운동 비판은 이러한 변화를 시야에 넣지 못하고 제1기의 시민운동의 성격에 의해 베헤렌 운동을 일면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⁴⁰⁾ 그에 따르면 제1기의 시민운동은 사생활은 지켜야 할 것으로서 존재하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행동 참가를 추동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루카와가 제2기로 분류한 1967년 말~1969년 가을에는 베헤렌 운동에서 과격한 투쟁 혹은 '혁명'을 연상시키는 활동들이 증대했다. 하네다(羽田) 투쟁, 인트레피드호 탈주병 지원활동, 사세보(佐世保) 엔터프라이즈호 기항 반대, 오지(王子)야전병원 설립저지투쟁, 미사토즈카(三里塚) 투쟁 등을 통해 베헤렌은 '과격 폭력집단'이라 불리기도 하고 체포나 사무소가택수색 등을 받기도 했다. 1969년 베헤렌 전국 간담회에서 베헤렌 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면서 '위기'를 넘기고, 베헤렌 운동은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970년에 접어들면서 베헤렌 운동은 문제별, 지역별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규모 가두 시위에 총결집하는 일은 없어지고, 기지, 자위대, 권리 옹호, 차별, 공해 등 개별 쟁점들을 다루는 그룹들이 나타났다.⁴¹⁾ 후루카와는 베헤렌을 '반전시민운동', 공해반대를 '지역주민운동'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 단계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쿠니(岩國)의 미군기지 내 반전운동 매체인 호피드를 사례로 들어, 대도시에서 지원세력으로 온 베헤렌 청년들이 아니라 이와쿠니에서 태어나고 자란, 생활의 기반을 이와쿠니에

40) 古川勇一, 「新たな出発に際して」, 『資料・「ベ平連」運動』 下巻, 443쪽에서 재인용.

41) 1970년 1월 31일, 2월 1일에 개최된 전국 간담회에서는 전국 119개 그룹이 1969년 활동 보고를 했다. '문제별, 지역별 세분화'는 거기에 나타난 경향이다. 후루카와는 구체적인 예로 각 베헤렌 그룹들의 활동을 고유의 계기를 기준으로, 자위대 기지나 미군기지 철거 투쟁, 미군병사나 자위대원에 대한 반군 공작, 오키나와 문제, 베트남인 유학생 강제 귀국 저지 문제, 오무라 수용소와 출입국관리법, 재일조선인 차별문제, 나아가 탄압 책임 추궁과 구원활동 등으로 구분했다. 古川勇一, 「ベ平連・六九年から七〇年へ: 市民運動の可能性」, 『資料・「ベ平連」運動』 中巻, 310쪽.

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후루카와는 지역에서 이런 집단이 탄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70년 이후 많은 베헤렌 그룹의 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였다.⁴²⁾ 이런 변화는 베헤렌이 전쟁, 권력 등의 큰 이슈가 구체적인 생활과 연관되어 전개되는 장으로서의 ‘지역’, 그리고 그 생활 지점에서 형성되는 주체로서의 ‘주민’에 눈을 돌리게 되었음을 뜻한다. 베헤렌의 시민운동은 더 이상 제1기의 ‘시민운동’은 아닌 새로운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는 베헤렌의 ‘시민’ 개념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후루카와는 제2기를 거치면서 생활 속에 내재된 전쟁과 침략의 구조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것과 아시아의 피침략·피억압 인민과의 연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만, 베헤렌 운동이 일본 내부의 피차별 인민의 존재를 시야에 넣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베헤렌이 발족한 이래 운동의 기반으로 삼아 온 ‘개인 원리’, ‘개인의 자발성’이라는 전제가 실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적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원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이념에 의거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연대를 추구했던 베헤렌의 ‘시민’ 개념은 일본 사회 내부의 민족, 신분, 계층 등 다양한 축에 의한 균열과 민중적인 ‘저변’이 사상(捨象)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시민’ 개념의 변화는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1970년 베헤렌 전국간담회에서는 베헤렌 운동의 개인 원리와 더불어 자주성, 자발성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도 이루어졌다. 지도부와 조직이 없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시민운동이지만,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행동을 제의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 참가자를 넘어서는 ‘조직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운동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고, 전체 정치상황, 전체 사회 속에서 운동의 위치를 바라본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동등하지만 개인 참가자들에 대해

42) 古川勇一, 「へ平連・六九年から七〇年へ：市民運動の可能性」, 444쪽.

‘조직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이의 지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⁴³⁾ 시민운동은 이데올로기적 일치를 피하고 입장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60년대 말 이후의 새로운 운동 형태는 시민의 참가 방식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조직자’ 외에도 ‘전일제 정치인간’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후루카와에 따르면, 지역별, 과제별 주제를 다루는 그룹의 활동들에서 “60년대 초기에 제시된 시간배분형 시민운동 참가자” 즉 ‘파트타임형’과는 다른 유형의 개인이 등장했다. 그것은 “비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던 종래의 ‘전일제 정치인간’(정당의 상임활동가 형태)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전일제 정치인간”이다.⁴⁴⁾

1965년 4월 도쿄에서 발족한 베헤렌은 1974년 1월 26일 도쿄의 간다(神田)에서 정식 해산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날 해산된 것은 여러 베헤렌들 중 최초로 탄생한 일명 ‘가구라자카(神樂坂) 베헤렌’(가구라자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베헤렌이라는 의미)이었다. 교토 베헤렌처럼 이미 해산한 곳도 있는 반면, ‘후쿠오카 베헤렌’, ‘동대C 베헤렌’ 등과 같이 앞으로도 베헤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인 그룹들도 있었다.

4. ‘보통주부’들의 ‘생활자’ 운동: 생활클럽생협

(1) 생활클럽생협의 탄생: 노동운동의 지역 전략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는 기존의 지역생협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생협이 등장했다. 오쿠보 가즈시(大窪一志)는 이런 생협들을 ‘지역시민생협’이라 칭하고, ①소비자운동과 시민자치라는 성격이 강한 시민운동형, ②여성운동·주부의 운동, ③도시주민의 공동운동 등을 그 특징으로 든다.⁴⁵⁾ 고도경제성장이 진전되

43) 古川勇一, 「へ平連運動の「総括」と展望」, 『現代の眼』, 1973년 4月号. 『資料・へ平連運動』 下巻, 312쪽에서 재인용.

44) 古川勇一, 「へ平連運動の「総括」と展望」, 『資料・へ平連運動』 下巻, 334쪽에서 재인용.

45) 1960년대 전반까지 지역생협으로서는 전전기 시민조합의 계보를 잇는 생협군과 전후 지역화를 추진하는 직역생협군 등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大窪一志, 『日本型生協の組織像』, 51, 52쪽).

던 당시, 각지에서는 고물가와 유해식품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구입 운동이 일어났다. 공동구입의 주체는 대개 단지 자치회나 지역 주민의 그룹이었는데, 공동구입 활동을 생협 설립으로 발전시키거나 공동구입을 하기 위해 생협을 설립했다.

1968년에 설립된 생활클럽생협도 이같은 성격을 공유하는 지역시민생협의 하나다. 단, 생협의 설립을 노동운동의 활동가가 주도했다는 점에 일반적인 지역시민생협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생활클럽생협은 1965년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에서 탄생한 ‘생활클럽’이라는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생활클럽은 60년 안보투쟁 때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는 사회당계 정치운동 그룹에서 활동했던 이와네 구니오(岩根邦雄)가 부인과 함께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면서 조직한 주부들의 모임이다. 이와네 부부는 우유를 싼 값에 사먹자는 취지로 회원을 모집하여 200명의 회원으로 생활클럽을 만들었다. 이후 회원 수와 사업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자 생협회를 추진하여 1968년 10월에 생활클럽생협을 창립하였다.

약 2년 반 후인 1971년 5월 요코하마(横浜)의 미도리(緑)구에 ‘미도리생협’이 창립되었는데, 그 설립을 주도한 것은 세타가야의 생활클럽 조직화에 참여했던 요코다 가즈미(横田克己)였다. 요코다는 사철(私鐵)인 도큐(東急) 노조 활동가이자 사회당원으로, 이와네와 함께 1957년 1월 결성된 ‘조직문제연구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조직문제연구회는 노동관계의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전체의 개혁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리더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실천의 장에서 조직형성을 도모하는 조직자이기도 했다. 요코다는 세타가야에서 생활클럽 만드는 데 참가했을 뿐 아니라, 생활클럽생협이 출범할 때는 도큐(東急) 노조원들로 직장반을 만들어 생협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9년부터 지역에 조직 만들기 시도하여 1971년 5월 1천 명의 출자를 받아 미도리생협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요코다가 생협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가 속한 도큐 노조의 1961년 춘투다. 당시 노조는 도큐 철도 이용자인 주민들의 맹반발에 부딪혔다. 당연히 자신들의 편이리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은 큰 충격이었고, 노조원들은 원인 규명을 위한 학습을 했다. 학습을 통해 도큐가 교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

지개발, 택지조성, 다양한 문화, 상업시설 등 온갖 투자 가능한 생활문화의 서비스 시설과 기능을 만들어, 연선 주민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주민의 동의를 획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노조는 스스로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지역 주민의 공감 같은 것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점도 깨달았다. 결국 도큐 자본과 맞서 노동자의 헤게모니를 확립하려면 지역에 기반한 운동이나 사업을 창출하여 그에 공감하는 주민과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역주민과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도큐 노조의 노동운동의 전략으로서 미도리생협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도큐 노조원들은 생협의 조합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원으로서도 운영에 참여했다. 생활클럽생협 출범 당시 100명이 넘는 도큐 직장반 조합원의 출자가 출자금 전체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생활클럽생협과 미도리생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도큐의 활동가 집단과 직장반에서 상당수가 직원으로 들어갔다. 생협으로의 이동은 안정된 직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이나 퇴직금, 연금 등을 포기하고 전망이 불확실한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오키다는 미도리생협을 설립한 뒤 3년간 무급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나, 석유위기를 계기로 생협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자 생협으로 전출하였다. 이 시기는 70년 전공투에 의한 대학 분쟁이 종료된 이후여서 각지에서 ‘실업중’인 ‘활동가’들이 미도리생협에 모여들어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⁴⁶⁾

(2) 전업주부를 기반으로 한 생협운동

이처럼 생활클럽생협(미도리생협도 뒤에 병칭을 생활클럽생협으로 변경함)은 당초 노동운동의 청년 활동가들에 의해 조직되었지만 여성들의 운동,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전업주부들의 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 아마노 마사코는 60년대 중반 일

46) 요코다에 의하면 이들은 '요구형 인재'들이어서 생협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도 요코다가 생협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

본사회에는 이제까지 운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는 주부들 사이에 운동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내발적인 불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부들을 생활클럽으로 조직화한 청년활동가들은 거기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한 데 불과하다고 보았다.⁴⁷⁾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도시부에 성역할분업에 기초한 핵가족과 더불어 방대한 전업주부층을 탄생시켰다. 1970년대 이후 생협운동의 주축을 이룬 것은 이들 전업주부층이었다.

생활클럽생협은 무점포 공동구입 방식을 선택했다. 무점포 공동구입 방식은 전전의 노동자 소비조합에서 시행했고 전후에도 일부 사례가 있으나, 지역시민생협에서 본격화되었다.⁴⁸⁾ 공동구입은 '반'(班) 단위로 이루어졌다. 조합원들은 반 단위로 조직되어 공동구매와 배분 활동을 했으며, 그 밖의 많은 활동들이 반을 기초 단위로 해서 이루어졌다. 주부들은 지역에서 반을 매개로 해서 생협에 참가했다. 이같은 무점포 공동구입 방식은 반 단위의 조합원들의 공동 작업과 이를 위한 일상적인 만남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70년대에는 고도성장에 수반되는 공해 등 사회문제의 부상을 배경으로 생협 가입자는 증가했다. 특히 1973년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조합원 수는 급증하여 도쿄와 가나가와를 합해서 2만 세대를 넘었으며, 사이타마(埼玉)에서도 생활클럽생협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반별 예약공동구입 시스템이 확립된 1977~78년 무렵 소비재 공동개발을 통해 생산자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생활클럽으로서 사회적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지향을 같이 하는 생협들의 명칭을 생활클럽생협으로 통일하였다. 생활클럽생협은 1973년 석유위기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비누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비누파' 생협들이 생활클럽생협으로 연계되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생활클럽에 들

47) 天野正子, 『「生活者」とは誰か』, 185쪽.

48) 大窪一志, 『日本型生協の組織像』, 56쪽.

어온 주부들은 생협 활동을 통해서 생산-소비-유통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사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생협활동이 사회운동, 정치운동으로 연결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동안 사회운동이나 공적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주부들이 반을 매개로 공동구입 활동을 비롯한 생협의 활동 및 운영에 참가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여 주체화하며 ‘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했다. 요코다는 1977~78년에 무점포에 의한 공동구입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이로써 조직을 참가형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자주관리하는 수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술회했다.⁴⁹⁾ 즉 생활클럽생협의 활동은 전업주부들에게는 참가형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훈련의 장이기도 했다.

(3) ‘보통주부’들의 정치운동 : ‘생활자 정치’의 추구

공동구매 이용자 = 소비자로서 생활클럽생협에 들어온 여성들은 생협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획득했고, 자신의 생활을 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바꾸고자 하는 ‘생활자’로 변화되어 간다. 이는 생산과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보통주부들이 생활을 정치, 생산과 연계시킴으로써 자신도 공적 영역에 참가하게 되는, 자기 변혁의 과정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과 교육, 쓰레기와 물 등은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지만 납세자가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데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공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 속하며, 결국 정치가 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납세자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클럽생협의 조합원인 주부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⁵⁰⁾ 1979년 도쿄도 네

49) 横田克己, 『愚かな国のしなやかな市民』, 東京: ほんの木, 2002, 64쪽.

50) 国広洋子, 『地域における主婦の政治的主体化: 代理人参加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分析から』, 地域社会学会編, 『地域社会学年報 第7集 地域社会学の新視点』, 東京: 時潮社, 1995; 한영혜, 『현대 일본 시민운동의 흐름』,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105~106쪽.

리마(練馬) 구의원 선거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보통주부’들을 생활클럽생협 조합원의 ‘정치적 대리인’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보내는 운동으로, 이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참가형 정치에 의한 시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생활클럽생협은 각 단위 생협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 운동도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도쿄에 이어 가나가와에서도 1983년 최초의 대리인이 탄생하였다. 가나가와의 대리인 운동은 1980년에는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의 주도로 전개된 ‘합성세제 추방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직접청구운동을 계기로 한다.⁵¹⁾ ‘삶의 방식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하에 전개된 이 운동은 가나가와현 내 7개 시에서 22만 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결국 모든 의회에서 부결되어 실패로 끝났다. 이를 계기로 생협의 조합원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 생활자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198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가와사키시에서 최초의 대리인이 탄생했고, 1984년 7월 1일 시민정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당으로서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약칭 가나가와네트)이 발족되었다.⁵²⁾

‘가나가와 네트’, ‘도쿄 네트’ 등에서 ‘네트’는 ‘생활자 네트워크’의 약칭인 ‘네트’에 지명을 붙인 것으로, 대리인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조직으로서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지역정당으로서 생활클럽생협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 모체가 된다. 또 생활클럽생협의 이념을 지방의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에 관한 일상적인 조사, 학습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입안한다. 대리인을 보낸 생활클럽생협의 조합원들은 생활의 배후에 감추어진 정치를 끌어냄으로써 ‘생활의 정치화’를 꾀하고, 대리인은 심의하는 사안들에 생활자의 관점을 투영함으로써 ‘정치의 생활화’를 꾀한다.⁵³⁾ 대리인 운동이 지방정치 참가에 집중하는 것은 ‘지방’ 또는 ‘지역’ 자체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

51) 神奈川ネットワーク運動, 『未来への責任: 神奈川ネットワーク』, 2002, 62쪽, 121~122쪽. 横田克己, 『愚かな国のしなやかな市民』, 64~65쪽.

52) 横田克己, 『愚かな国のしなやかな市民』, 122쪽.

53) 国広洋子, 『地域における主婦の政治的主体化—代理人参加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分析から』, 한영혜, 『현대 일본 시민운동의 흐름』, 106~107쪽.

존 정치 질서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며 생활과 정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1979년 도쿄도 네리마구(練馬区)에서 첫 대리인이 나온 데 이어, 1982년 3월에는 마치다(町田)시, 1983년 1월 호야(保谷)시에서 대리인이 탄생했고, 1983년 4월의 통일지방선거에서는 새롭게 4명이 당선되었다. 1987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는 13명이 대리인이 탄생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⁵⁴⁾

5. 결론

쓰루오카생협, 베헤렌, 생활클럽생협, 이들이 추구한 운동은 모두 '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각 운동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쓰루오카생협은 노조 지구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노조원이 아닌 지역 주민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지역은 노동자와 농민, 상점주 등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장으로서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가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쓰루오카생협은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나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 그 배후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학습과 운동을 통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을 침해하고 지배하는 국가와 독점 자본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쓰루오카생협의 운동에서 '생활'은 '지역'을 토대로 하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적인 총체로서 파악되며, '협동'을 통해 이를 방어하고자 했다.

쓰루오카생협이 '생활'을 '지역', '협동'과 결부시킨 데 반해, 베헤렌 운동에서는 '생활'이 '개인', '자율성'과 결부되었다. 베헤렌의 '시민운동'에서 '생활'은 '사생활'과 동의어로서, 한편으로는 '정치, 조직, 전위',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

54) 佐藤慶幸・天野正子 等 編著, 『女性たちの生活者運動』, 東京: マルジュ社, 184쪽

로기, 명분, 이론' 등의 대척점에 놓인다. 이 모든 것이 행동의 외재적인 요인인 데 대해, '생활'은 '실감'을 통해 개인을 내면으로부터 추동할 수 있는 근거다. '보통 시민'은 조직의 논리나 공적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감각에 의해 움직인다. 지켜야 할 사생활을 갖고 있고 사생활의 권리와 이익에 민감한 개인들을 공적인 문제에 관한 행동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운동이 조직되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회로를 제공해야 한다. 위대한 사상에 기초한 혁명이 아니라 생활감각에 기초한 약한 개인들의 '세상 바꾸기', 이것이 베헤렌의 '시민운동' 개념이다. 이같은 '시민', '시민운동' 개념은 당시 일본의 반체제운동에 내재하는 권위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포한다. 여기서 개인과 생활(=사생활)은 체제·반체제,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일본의 정치, 운동집단에 존재하는 권력성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끝으로 생활클럽생협의 경우, '생활'은 생산과 분리된 '소비'로 나타난다. 지역은 생산지점과 분리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을 책임지는 전업주부층이다. 전업주부는 공적영역과 생산영역=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소비에 매몰된 사적영역으로서의 생활을 전담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들만이 지역의 '전일제 주민', '전일제 시민'이다. 생활클럽생협의 운동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생활의 방어가 아니라 변혁이며 이는 주부 개인의 자기 변혁과 동시에 추구된다. 본래 생명을 창출하는 활동의 총체로서의 생활은 분절되어 생활= '소비'로 축소된 채 정치(국가)와 경제(자본)에 종속된 상태다. 따라서 생활의 변혁은 정치와 경제와의 항상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개인의 변혁은 '소비자'로부터 생활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바뀌어 나가는 '생활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참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운동은 생활자로서의 시민이 생활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와 같이 생활클럽생협의 운동에서 생활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소비'로 왜소화되고 '공'에서 배제된 현실의 생활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바꾸어서 구현하고자 하는 생명 창출 활동의 총체로서 자율성을 갖는 생활이다. 여기서 생활은 지역과 연계된다.

이렇게 쓰루오카생협, 베헤렌, 생활클럽생협은 생활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고 상이한 의미를 부여했으나, '생활'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끌어내어 운동의 논리에 자리매김한 점은 공통된다. 또한 '생활'이 '지역'과 연결되는 것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베헤렌은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운동이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을 재발견하게 된다. '생활'과 '지역'이 연결되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제 시스템 속에서 지역은 지배구조의 주변에 놓이고, 저변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운동은 각각 저항의 지점을 갖고 있다. 쓰루오카생협의 운동은 국가와 독점자본의 생활 = 지역 지배에 대한 저항, 베헤렌의 '시민운동'은 보수 = 체제 측과 혁신 = 반체제측에 공히 내재된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구조에 대한 저항, 생활클럽생협은 생활이 소비로 왜소화되고 국가와 자본에 종속된 전 시스템(생활의 종속성 자체를 포함)에 대한 저항이다. 이들을 거칠게 '구조' 내지 '체제'라고 표현한다면 생활은 '구조'('체제')에 의해 침해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삶이며, 그로부터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이 운동의 주체와 추동력은 바로 그 생활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구조' 내지 '체제'의 주변부에 놓인 소수자다. 이 글에서 고찰한 세 운동체에서 그것은 '노동자 · 지역 주민'(쓰루오카생협)이거나 '보통시민'(베헤렌)이거나 '보통주부'(생활클럽생협)였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에서 주변적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 쓰루오카생협도 지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주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조직의 구성원은 '노동자(와 주민) 세대'이며 주부 개인의 존재감이나 주부의 주변적 위치는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생활클럽생협의 경우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조직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상을 주부 개인으로 상정했고, 이들은 전업주부의 주변적인 위치를 운동의 지렛대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계급이나 계층적 위치에 대한 자각은 볼 수 없다. 베헤렌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비조직' 영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사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도시 중간계층이 많았다. 이들은 국가나 노조 등 집단의 명분이나 힘에 의하여 개인의

의사나 정치적 입장이 억압당하는 것에서 '보통시민'의 취약한 위치를 보았지만, '시민'의 계급·계층적 위치를 숙고하지는 않았다. 노동자·여성(주부)·시민, 이 세 주체들은 서로 다른 축에 의해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균열들을 보여 준다.

사회 내에는 서로 다른 축에 의해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지점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 운동의 이념과 논리가 만들어진다. 베헤렌은 운동 과정에서 '시민'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저변의 '피억압 민중'의 존재와 지역이라는 토대를 인식하게 되며, 운동의 방향도 변화해 간다. 생활클럽생협에서는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 '생활자' 정체성에 한계를 느낀다. '생활'의 저항성의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일본사회에는 과거와는 다른 균열의 축들이 존재하여 새로운 주변적 위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생활'은 여기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시민운동', '생활', 이런 말들이 범람하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생활세계, 시민사회의 재편 방향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고, 얼마간이라도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터 현재까지 취업연계부조 형태의 제2사회안정망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구성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중대한 변화이다. 일본정부가 제2사회안정망을 도입한 원인은 비정규 근로와 근로빈곤층의 증가, 커뮤니티 유니온(community union)의 결성과 저항, 반(反)빈곤네트워크 등 조밀한 시민사회의 형성 및 저항, 기존 노조의 정책변화 때문이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화와 기업별 노사관계, 기여형 사회보험이라는 노동배제 시스템이 사각지대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의 고용전략 변화가 노동배제 시스템의 변화인지를 좀더 살펴보고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사례로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규제, 파견법, 제2사회안정망, 조밀한 시민사회, 커뮤니티 유니온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과 시민참가 | 박희숙

투고일자: 2010년 12월 11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일본의 생활연구에서는 현재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이 생활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생활보장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1990년대의 시민참가를 분석한 결과, 생활자 정치는 정채되고 생활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개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당사자주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개호보험은 생활문제의 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파견촌의 사례는 현재의 고용중심적 생활보장시스템의 허약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으로는 지역중심성과 공적 책임의 중요성, 당사자주권의 강화, 제도화와 시민의 협동,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주제어: 생활보장시스템, 시민참가, 사회적 연대

일본 시민운동에서의 ‘생활’의 의미 | 한영혜

투고일자: 2010년 12월 17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에서 ‘생활’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저항적 의미를 지니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말이 대부분 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에 등장하는 한편, 정부의 행정개혁과 맞물린 시민활동 육성정책에 의해 생활 관련 시민활동이 증대하는 가운데, 오늘날 ‘생활’에 함축된 정치적·사상적 의미는 모호해졌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이 글은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사례들에서 ‘생활’ 개념의 비판적·저항적 의미를 끌어내어 오늘날 일본사회의 맥락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고찰 대상은 1955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창립되어 노동자와 주민을 함께 조직화한 쓰루오카(鶴岡)생협, 1965년 베트남 전쟁 반대를 목표로 결성되어 개인의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서 ‘시민운동’을 추구한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헤렌), 1968년에 설립되어 여성 특히 전업주부층을 조직화하고 생활자 정치 운동으로까지 나아간 생활클럽생협 등 세 사례다. 이들은 노동자(+지역주민), 시민, 주부 등 상이한 계층을 인적 기반으로 한 만큼 서로 다른 저항의 지

점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생활’을 의제화하는 관점이나 목표, 논리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생활’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끌어내어 운동의 논리에 자리매김한 점은 공통된다. ‘생활’은 ‘구조’(체제)에 의해 침해당하고 지배당하는 민초들의 삶이며, 그 구조의 주변부에 놓인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때, 운동의 주체와 추동력을 바로 그 생활 속에서 형성하고자 하며, 운동 담론에서 ‘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 내에는 서로 다른 축에 의해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지점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해서 운동의 이념과 논리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일본사회에는 과거와는 다른 균열의 축들이 존재하여 새로운 주변적 위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생활’은 여기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제어: 생활, 생협운동, 베헤렌

특집시론 / ‘잃어버린 20년’간의 일본인의 경제생활: 가계구조·소비행동·생활의식 | 이수진

투고일자: 2010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 속에서의 개별 가계의 경제상황, 경제생활 및 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소비행동의 특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버블경제 붕괴기’(1990~1997)의 특징은, 가계저축률은 증가하는데 실질소비지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고 가격이 매우 싼 상품이 다수 인기를 얻었다. ‘경기침체기’(1998~2001)에는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활자들은 상품의 질에 비해 가격은 싼 절약지향의 상품을 선호하였다. ‘경기회복기’(2002~2006)에는 소득 I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증가하였고, 소비 측면에서는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색다른 프리미엄상품의 등장 및 건강지향적인 생활자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불황기’(2007~2009)에는 소득 I분위 계층과 소득 V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의 차이가 커졌으며, 이를 반영하듯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어났다. 소비행동면의 특징으로는 ‘값은 싸지만 품질과 성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상품들이 선호되었고 절약지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버블경제 붕괴기, 경기침체기, 경기회복기, 심각한 불황기, 생활수준 저하, 절약지향

지각의 인식론적 경계 위에서: 아쿠타가와 및 구로사와의 작품에서 ‘라쇼몽’이 의미하는 것 | 장경렬

투고일자: 2010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문학 작품들인 「라쇼몽」(羅生門, 1915)과 「덤불속」(藪の中, 1922),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영화 <라쇼몽>(羅生門, 1950)의 제목에 나오는 ‘덤불’과 ‘라쇼몽’이라는 표현은 소설 또는 영화가 이야기와 관련하여 암시하는 바를 함축하여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일 수 있다. 아울러, 소설과 영화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이해의 좌표로 우리를 이끄는 핵심 단어일 수 있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a second social safety net in 2008 in the form of job-seeking assistance. It is a major change in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until then, consisted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The second safety net was put into action following the increase in non-standard workers and the working-poor, the birth of community unions and their resistance, the rise of tight-knit civil society such as the anti-poverty network, and the changes in the union policies. Third, Japan and Korea are similar in a sense that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company-level unionization, and the labor-exclusionary system of contribution-based social insurance system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unprotected workers. Thus it would be valuable to assess whether the changes in Japan's employment strategy signal a change in the labor-exclusionary system, and whether they could be a reference point when we address Korea's social issues.

Keywords : Regulations, Worker Dispatch Act, second safety net, tight-knit civil society, community union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Japan since 1990 _ PARK Hee 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fe security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Japan. Since the 1990's,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has been in the state of dysfunction. "Politics for the people" are not solving these problems, and the independent movements by the disabled people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ws both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alized social insurance system. "Hakenmura Problem" show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ivelihood security system, whose main concern lies in the issues of unemployment. Today's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raises important issues such as decentralization(localization), empowerment of the people, cooperative systematization by the citizens, and social solidarity within the workings of the system.

Keywords : livelihood security system, citizen participation, social solidarity.

The Meaning of "Seikatsu"(Life) in the Citizen's Movement in Contemporary Japan

_ HAN Young Hae

The social movements in postwar Japan utilized the word "seikatsu"(life) as a strategic concept that contains both critical and resisting implications against the existing system. However, since the 1990s, it slowly became hard to fin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notations within the word "seikatsu", as almost all political parties began using the term in their political propaganda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standpoints and civic activities have increased along with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ir related policies promoting civil activities. This paper attempts to draw forth the critical and resisting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seikatsu", drawing from the cases of civil movements that took place in the postwar period, and also to search for the possibilities that place those implications within the context of today's Japanese society.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ree cases: Tsuruoka Co-op initiated by the labor unions in 1955 and encompassed both workers and local residents; "Peace to Vietnam! Citizen's Association (so-called Beheiren), formed in 1965 as a protest against the Vietnam War and proposed 'Shimin-undo'(citizen's movement) as a new type of social movement that was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s by the individuals, and Seikatsu Kurabu(Life Club) Co-op, established in 1968 with the participation of housewives and developed later into life-

political movement. These three organizations were characterized by different human bases, namely labors (and the residents), citizens, and house-mothers, therefore also differing in their standpoints, purposes, as well as the logics for the ways in which they represented the issues of “seikatsu”. However,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pulled out a constructive meaning from “seikatsu” and built it in to the logic of each movement. “seikatsu” is the livelihood of the grass-roots people who are invaded and controlled by the system, and those who are marginalized attempt to secure their independence and subjectivity through the social movements. When this happens, the actors and the energy of the movements attempts to found itself on the basis of their livelihood, which gives the central meaning to the discourse of the movements. There are different axes of cleavages within the society, and around each axis exist those who create the ideology and the logics of the movements for the given base of their social identity. In today’s Japanese society, a new cleavage is creating a new axis as well as the new periphery, around which the concept of “seikatsu” could hold an important strategic implication.

Keywords : seikatsu(life), seikatusha, citizen, citizen’s movement, cooperative movement, life politics, community

Comments & Essays / Japanese Economic Life and Consumption Patterns during the Lost Two Decades _ LEE Su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economic life and consumption patterns during the prolonged period of economic downturn after the burst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1990s. I divided the post-bubble economy period into four phases according to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that describe the lives of the Japanese people.

“first period”(1990~1997)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 savings rate and non-expenditure rate, while the real expenditure rate decreased. Low-priced goods experienced a great success. During the “second period”(1998~2001), both real disposable income and real expenditure decreased sharply and people began to prefer purchasing money saving-oriented goods, whose quality is quite higher compared to its price. The “third period”(2002~2006),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in the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among those whose income rate is at bottom 20 percent. The consumers were choosing the health-conscious foods and premium goods whose prices were not too out-of-range. The final phase, or what I call “fourth period”(2007~2009), was the time during which the gap between the top 20 percent and bottom 20 percent groups was widened. Reflecting this slump period, about 5 percent of the people answered that they didn’t feel the improvement of their living standards. They pursued to attain low-priced but high-quality goods.

Keywords : period of bubble economy, low standard of living, saving-oriented

On the Epistemological Borderline of Perception : What the ‘Rashomon’ Refers to in the Works of Akutagawa & Kurosawa _ JANG Gyung-ryul

‘Rashomon’ and ‘grove,’ two words that appear in the titles of the literary works by Ryunosuke Akutagawa, “Rashomon”(1915) and “In a Grove” (1922), or in that of the motion picture directed by Akira Kurosawa, *Rashomon*(1950), could be conceivably a series of signs that sum up the thematic implications of the stories or the movie. They also could be considered as some valuable keywords that would lead us to the frame of understanding which, in turn,